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근영)는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 **현황과** 주요 **원인**을 살펴본 후,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들을 **모색**
- 대구경북지역은 **총인구가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령화**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40년** 전후로는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대구경북지역 **인구 감소**는 **대부분**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왔으나 앞으로는 혼인율·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
-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소비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이 나타나면서 **투자유인이 줄어들고 생산·일자리가 축소**
 - **대구와 경북**의 가계소비지출은 2020~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전망** (전국은 2030~35년부터 감소 예상)
-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귀농·귀촌 지원** ③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 ④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 ⑤ **광역지자체 주도의 정책 실행** 등의 노력이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처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이형구
Tel. (053)429-0256 Fax. (053)429-0219 E-mail. daegu@bok.or.kr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대구경북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감소 · 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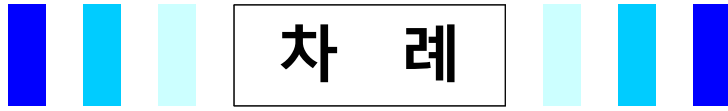
2022. 2.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작성자 : 이형구 과장, 배한이 과장

조연자 : 윤용준 팀장, 허돈구 부장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약 〉

- I. 검토 배경 1
- II.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험 현황 2
 - 1. 인구감소 현황 2
 - 2. 지방소멸위험 현황 6
- III. 인구감소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 원인 8
 - 1.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 증감 8
 - 2.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 11
 - 3. 인구감소 기여도 14
- IV.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15
 - 1.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15
 - 2. 가계소비지출 추정 16
 - 3. 민간소비에 의한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추정 21
- V. 평가 및 대응방안 22
 - 1. 평 가 22
 - 2. 대응방안 23

〈참고 문헌〉

【 요약 】

I |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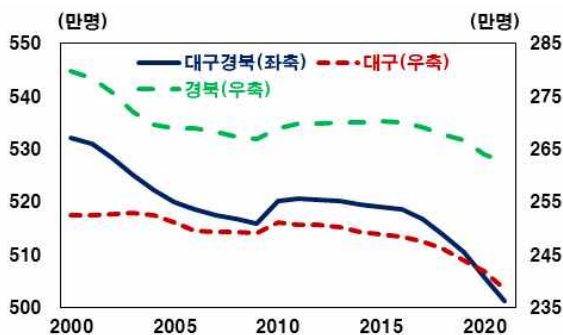
- 대구경북지역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향후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

⇒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 심화, 지방소멸위험 확대 현황 및 주요 원인을 살펴본 후 대구경북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모색

II |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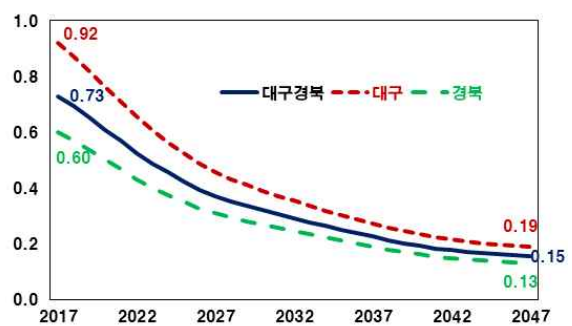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은 총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령화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
 - 향후 대구 인구가 경북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할 전망
- 2020년 현재 경상북도가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대구는 비교적 양호) 하였으며, 2040년 전후로는 경북 뿐만 아니라 대구도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특히 2021년 현재 경북 군지역(칠곡군 제외) 전체로는 이미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

대구경북 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대구경북 지방소멸 위험지수 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감소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 원인

□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를 ①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 증감(출생아수 - 사망자수), ②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인구이동)으로 나누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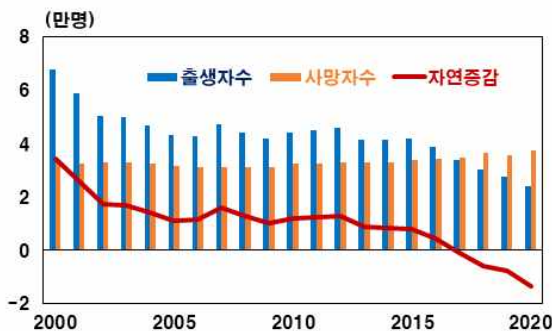
○ 자연 증감의 경우, 대구경북지역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7년부터는 인구가 자연감소로 전환

— 대구와 경북의 자연증가율은 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사회적 증감의 경우, 2011년 이후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 가운데 청년층(15~29세)의 사회적 감소(수도권으로의 유출)가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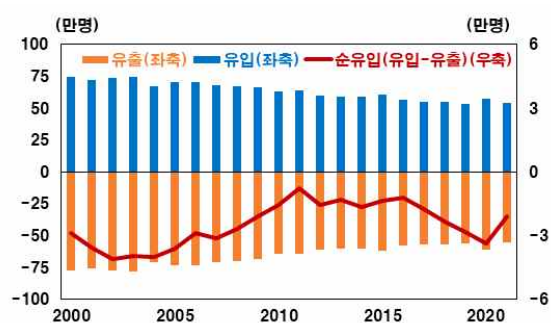
— 청년층 인구를 중심으로 주로 15~49세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며 최근 5년간(2017~2021) 대구경북 15~29세 유출인구의 87.1%가 수도권으로 이동

대구경북지역 인구 자연증감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대구경북지역 인구 사회증감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인구 감소는 대부분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왔으나 혼인율과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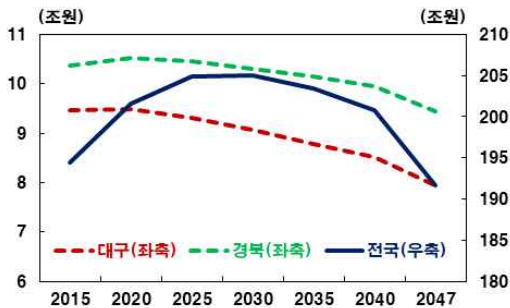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자연 감소 인구수가 사회적 감소 인구수보다 커지게 되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III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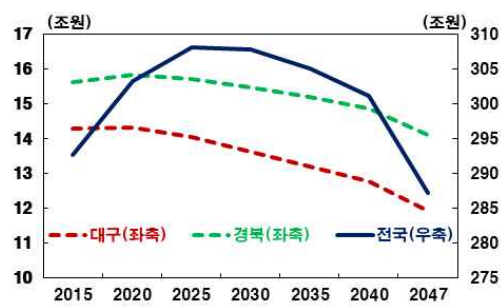
- 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노동생산성 저하 및 역내 소비시장 규모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지역투자유인 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대구와 경북의 가계소비지출은 2020~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구의 가계소비지출이 경북보다 빠르게 감소할 전망
 - * 자세한 추정 방법은 p.17 <참고2> 참조
 - 상품별로는 60세 이상 가구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농림수산물과 전기가스수도 등 향후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겠으나, 40~59세 가구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제조업 가계소비지출 전망



자료: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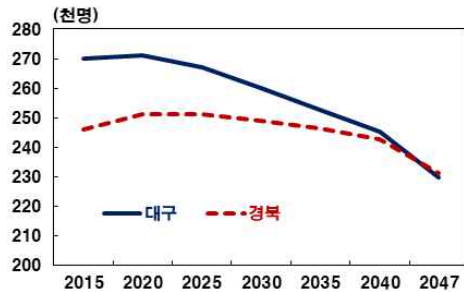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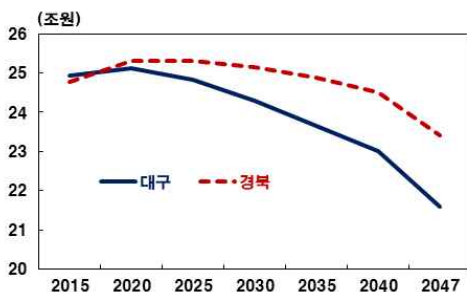
서비스업 가계소비지출 전망



자료: 자체 추정

- 이에 따라 민간소비에 의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는 대구는 대략 2020~2025년부터, 경북은 2025~203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대구의 감소폭이 경북보다 가파를 것으로 예상
 - * 자세한 추정방식은 p.33 <붙임2> 참조

대구와 경북 지역내 민간소비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생산유발액) (취업유발인원)



주: 1) 해당년도의 대구와 경북 민간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유발된 역내 생산액, 취업자수
자료: 자체 추정

IV

평가 및 대응방안

1 평가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은 총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령화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40년 전후로는 경북 뿐만 아니라 대구도 지방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인구 감소는 대부분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왔으나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
- 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노동생산성 저하 및 역내 소비시장 규모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대구와 경북의 가계소비지출은 2020~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에 의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도 대구는 대략 2020~2025년부터, 경북은 2025~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

2 대응방안

-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층 등의 순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등이 필요
- ② (귀농·귀촌 지원) 경북의 지역소멸위험이 큰 군지역들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
- ③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 저학력·저숙련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인력 등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 ④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 일과 가정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⑤ (광역지자체 주도의 정책 실행)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 시 중앙정부 정책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대학, 기업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

I 검토 배경

-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험**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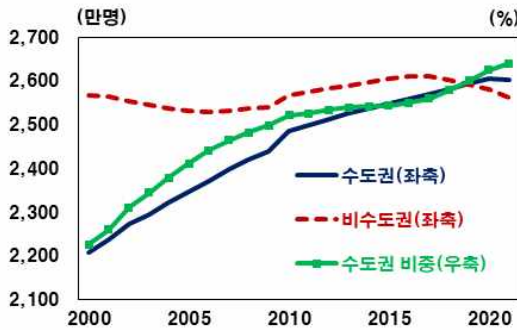
* 2019년 처음으로 전체 인구 중 수도권 거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

- 지역에서의 저출산과 인구 유출이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에 따른 혼잡도 증가는 수도권에서의 초저출산*도 초래

* 2020년중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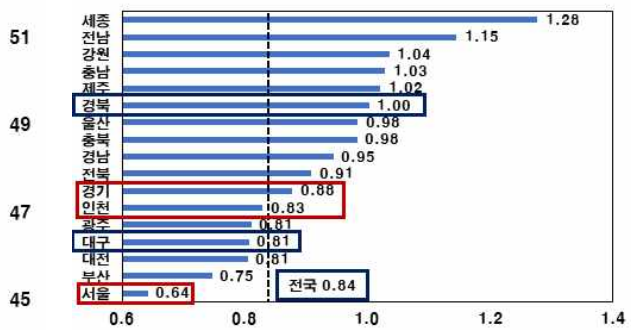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전국 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시도별 합계출산율(202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2070년에는 3,766만명(매년 평균 28.4만명 감소)으로 낮아질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1.12.9일 업데이트)

-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향후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

* 2020년 대구의 자연증가율#은 -1.4로 광역시중 부산(-2.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경북은 -3.8로 광역도중 전남(-4.2) 다음으로 낮았음

인구 천명당 한해의 자연증가(출생-사망)를 의미하며 조출생률-조사망률로 계산

** 2021년중 대구의 고령인구비중(65세이상인구/전체인구)은 17.0%로 광역시중 부산(19.8%) 다음으로 높았으며 경북은 22.2%로 광역도중 전남(23.9%) 다음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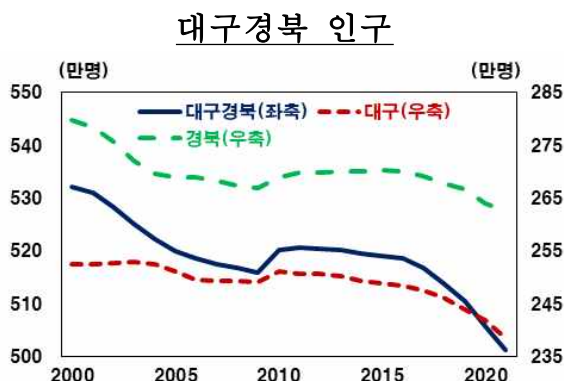
⇒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 심화, **지방소멸위험 확대 현황** 및 주요 원인을 살펴본 후 **대구경북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모색

II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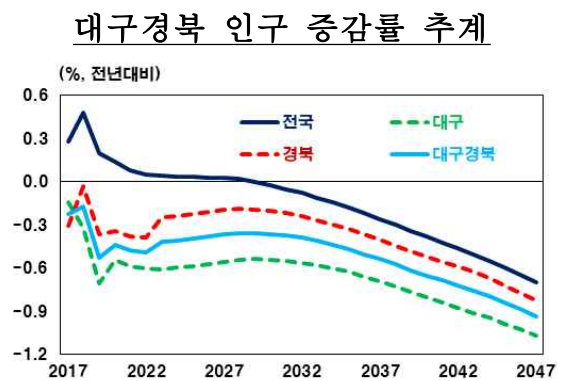
-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은 총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령화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
 - 향후 대구 인구가 경북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할 전망
- ◆ 2020년 현재 경상북도가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대구는 비교적 양호) 하였으며, 2040년 전후로는 경북 뿐만 아니라 대구도 지방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특히 2021년 현재 경북 군지역(칠곡군 제외) 전체로는 이미 지방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

1 인구감소 현황

- 대구경북지역의 총인구는 2021년 현재 501.2만명(대구 238.5만명, 경북 262.7만명)으로 2000년(532.1만명, 최고치) 이후 30.9만명 감소(연평균 1.5만명) 하였고, 2047년(438.3만명)까지 추가로 62.9만명(연평균 2.4만명) 줄어듦 전망
 - 향후 대구 인구가 경북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할 전망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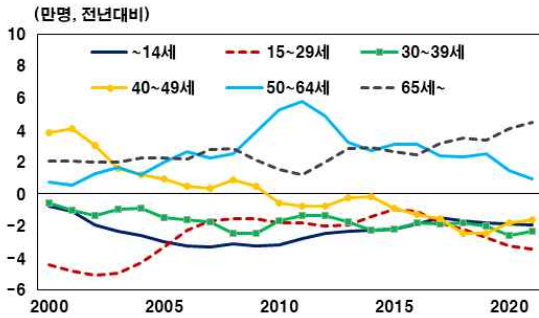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연령별로는 2000년 이후 50세 미만 인구가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인구는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고령화가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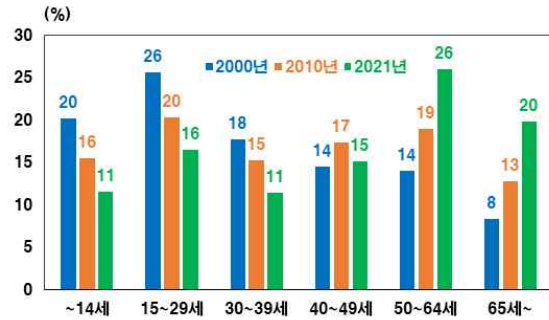
* 대구경북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 2000년 8.3% → 2010년 12.8% → 2021년 19.7%

대구경북 연령별 인구 증감¹⁾



주: 1) 해당연도 인구 - 직전연도 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대구경북 연령별 인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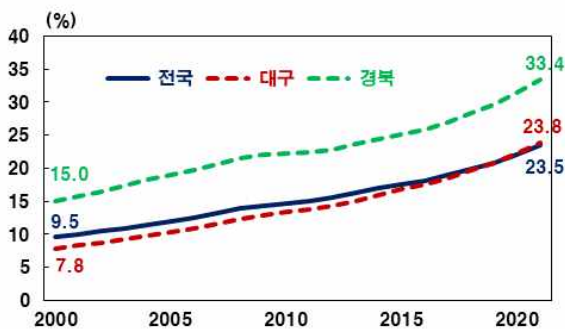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경북은 전국과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대구는 각각 2020년 및 2016년부터 전국 수준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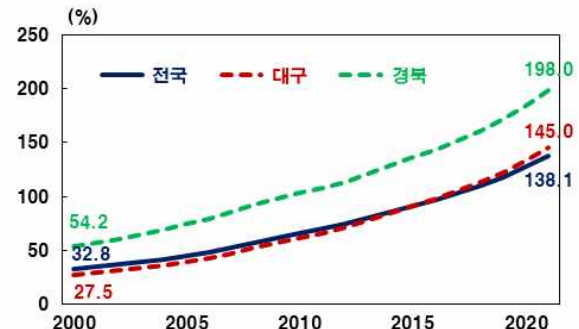
* 노년부양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100, 노령화지수=고령인구/유소년인구×100

대구경북 노년부양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대구경북 노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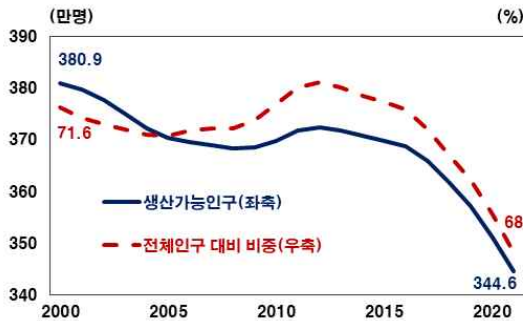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대구경북지역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1999년 381.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1년에는 36.6만명(연평균 1.7만명) 줄어든 344.6만명을 기록하였으며, 2047년까지 130.9만명(연평균 5.0만명) 추가 감소 예상

* 전국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최고치(3,735만명)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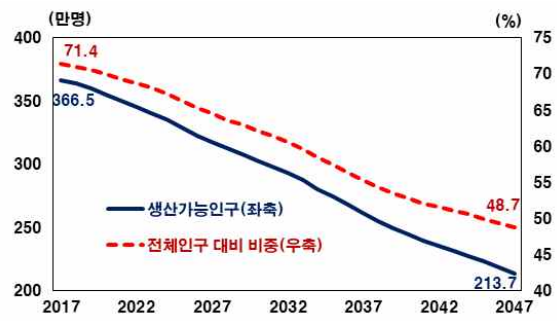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가 지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68.8%에서 2047년 48.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대구경북 생산가능인구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대구경북 생산가능인구 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대구 2개구(남구, 서구)와 경북 16개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 (2021.10.18일)

*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참고1>

대구경북 시군구별 인구변화

- 2021년 기준 대구내 구·군별 총인구는 달서구(54.5만명, 22.8%), 북구(43.7만명, 18.3%), 수성구(41.7만명, 17.5%) 순으로 많으며, 경북내 시·군별 총인구는 포항시(50.4만명, 19.2%), 구미시(41.3만명, 15.7%), 경산시(26.8만명, 10.2%), 경주시(25.2만명, 9.6%) 순임
- 2000년과 비교시 대구의 경우 달성군(+10.8만명), 북구(+2.8만명) 등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서구(-12.2만명), 남구(-5.3만명), 달서구(-4.4만명) 등은 인구가 감소
- 경북의 경우에는 군지역 인구(2000년 64.1만명 → 2021년 52.2만명)가 시지역 (2000년 215.6만명 → 2021년 210.4만명)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한 가운데
 - 구미시(+7.6만명), 경산시(+5.5만명) 칠곡군(+1.0만명) 등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경주시(-3.8만명), 영주시(-2.9만명), 상주시(-2.9만명) 등은 인구가 감소
 - 칠곡군을 제외한 모든 군지역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소멸 위험에 노출

2000년 대비 2021년 대구경북지역내 시·구·군별 총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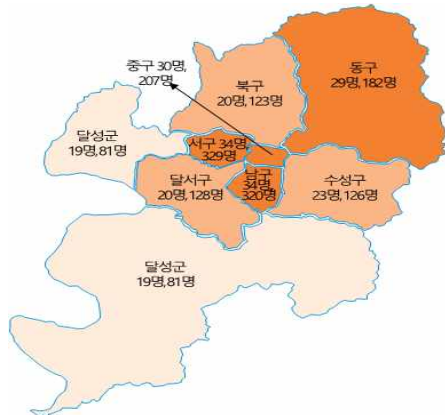
(만명, %, %p)

	2000년(A)		2021년(B)		차이(B-A)		증감률	
대구시	252.4	(100.0)	238.5	(100.0)	-13.9	(0.0)	-5.5	[-0.3]
중구	9.2	(3.6)	7.5	(3.1)	-1.7	(-0.5)	-18.6	[-1.0]
동구	33.8	(13.4)	34.1	(14.3)	0.3	(0.9)	1.0	[0.0]
서구	28.6	(11.3)	16.5	(6.9)	-12.2	(-4.4)	-42.5	[-2.7]
남구	19.6	(7.8)	14.3	(6.0)	-5.3	(-1.8)	-27.1	[-1.8]
북구	40.9	(16.2)	43.7	(18.3)	2.8	(2.1)	6.8	[0.3]
수성구	46.0	(18.2)	41.7	(17.5)	-4.3	(-0.7)	-9.3	[-0.5]
달서구	58.9	(23.3)	54.5	(22.8)	-4.4	(-0.5)	-7.4	[-0.4]
달성군	15.4	(6.1)	26.2	(11.0)	10.8	(4.9)	70.1	[2.7]
경상북도	279.7	(100.0)	262.7	(100.0)	-17.1	(0.0)	-6.1	[-0.3]
시지역	215.6	(77.1)	210.4	(80.1)	-5.2	(3.0)	-2.4	[-0.1]
포항시	51.6	(18.4)	50.4	(19.2)	-1.2	(0.7)	-2.3	[-0.1]
경주시	29.0	(10.4)	25.2	(9.6)	-3.8	(-0.8)	-13.2	[-0.7]
김천시	15.0	(5.4)	14.0	(5.3)	-1.0	(0.0)	-6.4	[-0.3]
안동시	18.4	(6.6)	15.7	(6.0)	-2.7	(-0.6)	-14.6	[-0.8]
구미시	33.7	(12.0)	41.3	(15.7)	7.6	(3.7)	22.5	[1.0]
영주시	13.1	(4.7)	10.2	(3.9)	-2.9	(-0.8)	-22.3	[-1.3]
영천시	12.0	(4.3)	10.2	(3.9)	-1.8	(-0.4)	-14.8	[-0.8]
상주시	12.5	(4.5)	9.6	(3.6)	-2.9	(-0.8)	-23.3	[-1.3]
문경시	9.0	(3.2)	7.1	(2.7)	-1.9	(-0.5)	-20.9	[-1.2]
경산시	21.4	(7.6)	26.8	(10.2)	5.5	(2.6)	25.5	[1.1]
군지역	64.1	(22.9)	52.2	(19.9)	-11.9	(-3.0)	-18.6	[-1.0]
군위군	3.3	(1.2)	2.3	(0.9)	-1.0	(-0.3)	-29.7	[-1.7]
의성군	7.6	(2.7)	5.1	(1.9)	-2.6	(-0.8)	-33.7	[-2.0]
청송군	3.4	(1.2)	2.5	(0.9)	-1.0	(-0.3)	-28.3	[-1.7]
영양군	2.3	(0.8)	1.6	(0.6)	-0.6	(-0.2)	-28.4	[-1.7]
영덕군	5.1	(1.8)	3.5	(1.3)	-1.6	(-0.5)	-30.9	[-1.8]
청도군	5.2	(1.9)	4.2	(1.6)	-1.1	(-0.3)	-20.2	[-1.1]
고령군	3.8	(1.3)	3.1	(1.2)	-0.7	(-0.2)	-18.5	[-1.0]
성주군	5.1	(1.8)	4.3	(1.6)	-0.8	(-0.2)	-16.2	[-0.9]
칠곡군	10.4	(3.7)	11.4	(4.3)	1.0	(0.6)	9.9	[0.5]
예천군	6.0	(2.1)	5.6	(2.1)	-0.4	(0.0)	-6.9	[-0.4]
봉화군	4.3	(1.5)	3.1	(1.2)	-1.2	(-0.4)	-28.2	[-1.6]
울진군	6.6	(2.4)	4.8	(1.8)	-1.8	(-0.5)	-27.8	[-1.6]
울릉군	1.0	(0.4)	0.9	(0.3)	-0.1	(0.0)	-13.4	[-0.7]

주: 1) ()내는 대구/경북지역 총인구 대비 비중, []내는 연평균 증감률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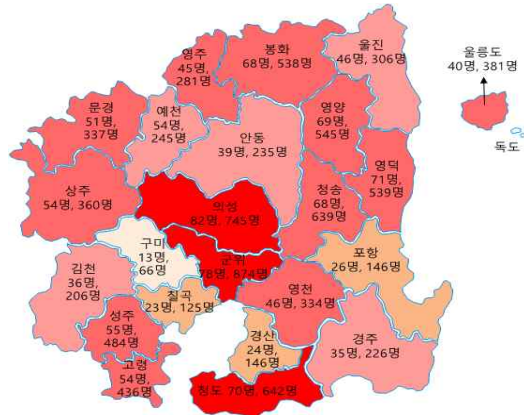
□ 한편 지역별 고령화 수준을 보면, 대구는 남구, 서구, 동구가, 경북은 의성, 군위, 청도에서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1년 대구 지자체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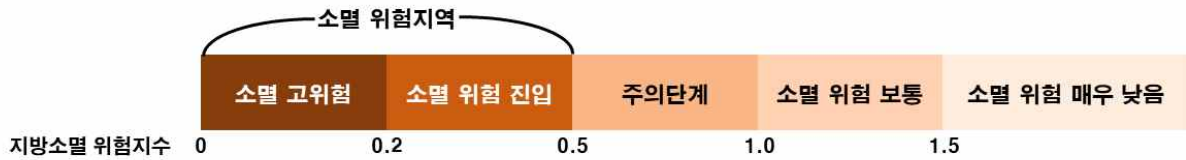
2021년 경북 지자체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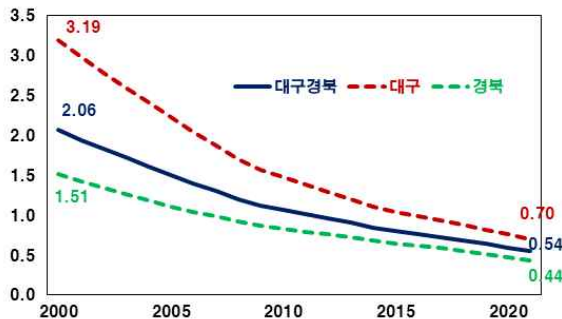
2 지방소멸위험* 현황

* 이상호(2018) 등을 참고하여 '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를 지방소멸 위험지수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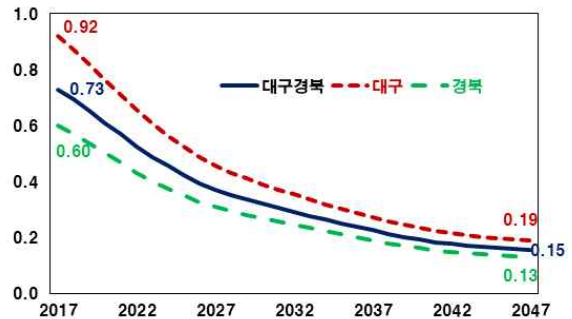
- 경북(2021년 소멸 위험지수 0.44)은 2020년 이미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반면 대구(0.70)의 소멸 위험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2040년 전후로는 대구와 경북 모두 고위험단계(0.2 하회)에 진입 예상 (대구 2045년, 경북 2037년)

대구경북 지방소멸 위험지수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대구경북 지방소멸 위험지수 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특히 2021년 현재 군위, 의성, 청송 등 **경북 군지역(칠곡군 제외)** 전체로는 이미 **고위험단계**(소멸위험지수 0.17)에 **진입**

— 최근 6년간 7개군(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이 위험 진입단계에서 고위험단계로 이동

시군구별 소멸 위험지수

	2015년말	2021년말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이상)	1(구미시)	0
소멸위험 보통 (1.0~1.5)	5(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	1(구미시)
소멸위험 주의 (0.5~1.0)	9(중구, 동구, 서구, 남구,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10(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 포항시, 경산시)
소멸위험 진입 (0.2~0.5)	14(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1(서구,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소멸 고위험 (0.2미만)	2(군위군, 의성군)	9(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합 계	31	3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III

인구감소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 원인

◆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를 ①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 증감(출생아수 - 사망자수), ②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인구이동)으로 나누어 분석**

- **자연 증감**의 경우, 대구경북지역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7년부터는 인구가 자연감소로 전환**
- **사회적 증감**의 경우, 2011년 이후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청년층(15~29세)의 사회적 감소(수도권으로의 유출)가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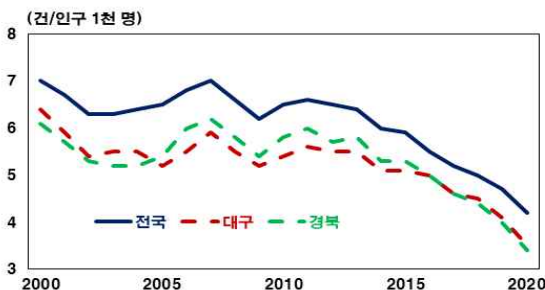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인구 감소는 대부분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왔으나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

□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를 ①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 증감(출생아수 - 사망자수), ②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인구이동)으로 나누어 분석

1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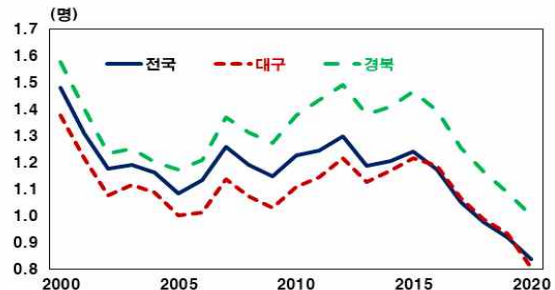
□ **대구와 경북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전국과 유사하게 고용 불안정,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5년부터 가파르게 **하락**

대구경북 조혼인율¹⁾



주: 1) 1년간 혼인건수/해당연도의 주민등록 연앙인구(7월 1일 기준 인구, 천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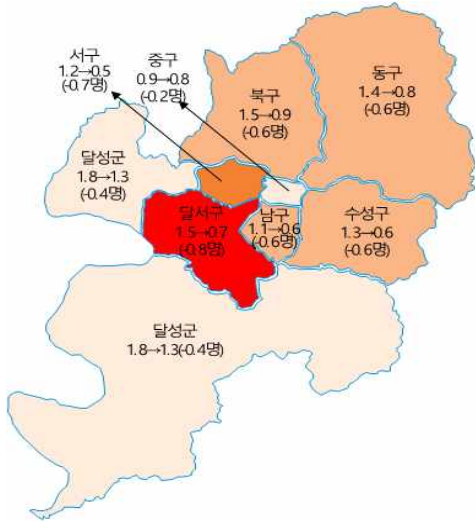
대구경북 합계출산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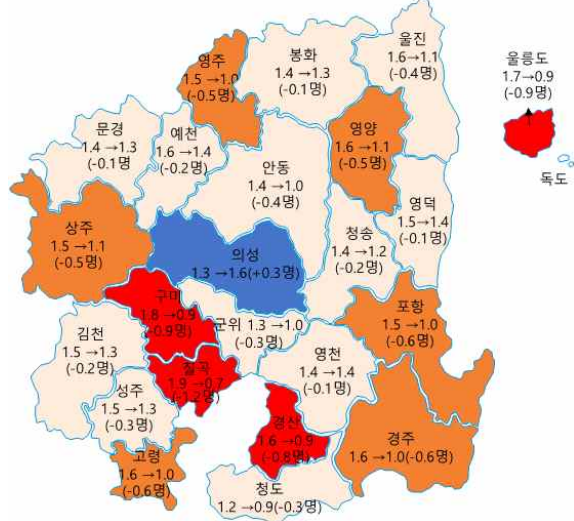
주: 1)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기초지자체별 합계출산율 하락폭(2000년 대비 2020년)은 대구 달서구(-0.8명), 서구(-0.7명), 경북 칠곡군(-1.2명), 구미시(-0.9명) 등이 큰 편임

대구 지자체별 합계출산율(2000→2020) 경북 지자체별 합계출산율(2000→2020)



주: 1) 붉은색 음영이 짙을수록 합계출산율이 2000년대비 2020년에 크게 하락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붉은색 음영이 짙을수록 합계출산율이 2000년대비 2020년에 크게 하락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전체 여성인구 중 20~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평균 초혼·출산 연령이 상승

20~39세 여성 비중

	20~39세 여성 비중 (%)					B-A
	00(A)	05	10	15	21(B)	
대구	36.9	33.8	29.0	25.6	23.5	-13.4
경북	31.8	29.2	25.6	22.8	19.5	-12.3
전국	35.7	33.3	29.8	27.1	25.1	-10.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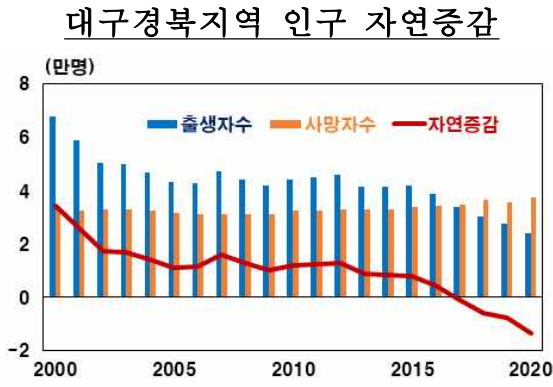
평균 초혼·출산 연령

		평균 초혼·출산 연령 (세)					B-A
		00(A)	05	10	15	20(B)	
초혼연령	대구	26.5	27.9	29.3	30.2	30.7	4.2
	경북	25.9	27.3	28.6	29.5	30.4	4.5
전국		26.5	27.7	28.9	30.0	30.8	4.3
출산연령	대구	29.1	30.3	31.4	32.4	33.0	3.9
	경북	28.7	29.8	30.6	31.7	32.6	3.9
	전국	29.0	30.2	31.3	32.2	33.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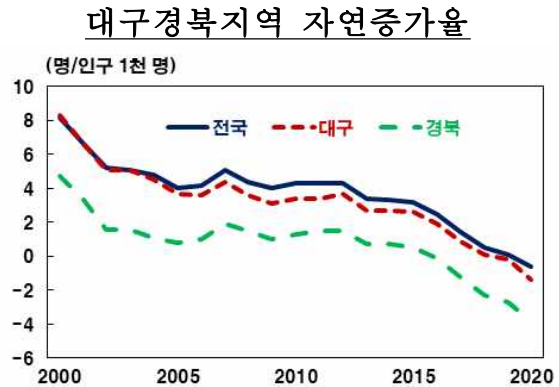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대구경북의 출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017년부터는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를 밑돌면서 인구가 자연감소로 전환

○ 대구와 경북의 자연증가율은 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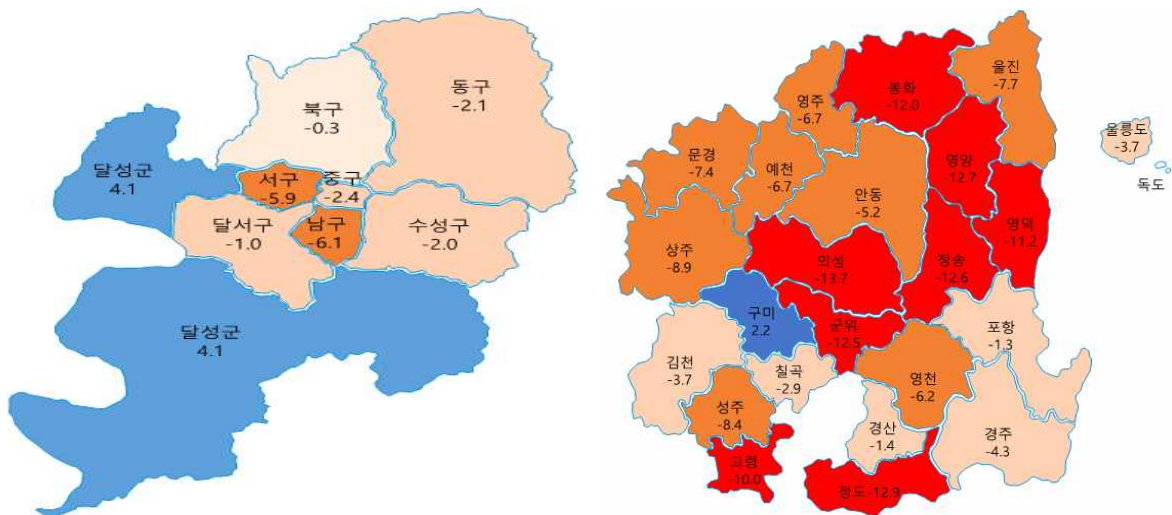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20년중 대구 달성군과 경북 구미시만 인구가 자연 증가(출생인구 > 사망인구)하였으며, 특히 경북은 전반적으로 자연 감소율이 큰 편임

2020년 지자체별 인구 자연증가율¹⁾
(대구) (경북)



주: 1) 인구 천명당 한해의 자연증가(출생-사망)를 의미하며 조출생률-조사망률로 계산
2) 푸른 음영이 짙을수록 자연증가율이 크며, 붉은 음영이 짙을수록 감소율이 큼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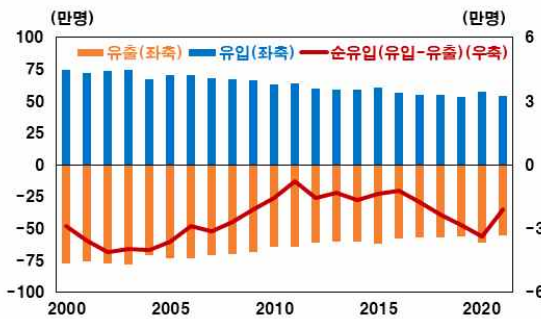
□ 2011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인구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2021년 20,982명 순유출)

○ 대구는 인구 순유출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경북은 2015년 이후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다 2021년에는 10년만에 인구 순유입으로 전환

— 2021년 경북*의 순유입 인구는 3.3천명이었으며 이중 대구로부터 9.1천명이 순유입된 가운데, 주로 직업(8.9천명), 가족(3.5천명), 주택(3.4천명)등의 사유로 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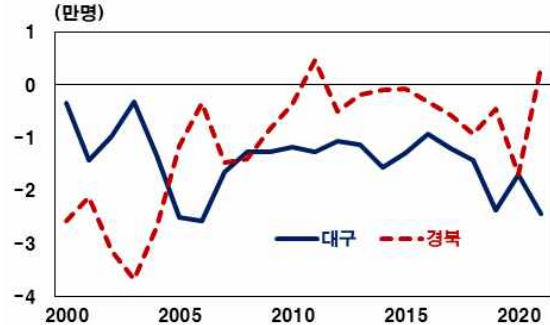
* 시군별로는 경산(5.1천명), 포항(1.2천명), 경주(1.0천명) 등이 시도간 순유입

대구경북지역 인구 사회증감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대구경북 인구의 순유입(유입-유출)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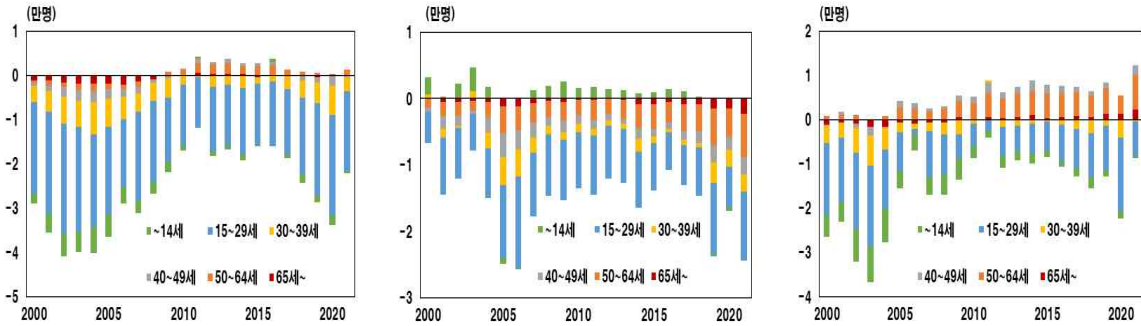
○ 대구경북의 인구 유출은 청년층(15~29세) 인구*를 중심으로 주로 15~49세 인구에서 발생

* 2017~21년중 대구경북지역 청년층 인구유출 규모(9.4만명)는 전체 인구유출(12.4만명)의 75.6%를 차지

— 대구는 전연령층에서 순유출이 지속되었고, 경북은 40대 이상의 순유입이 지속*되었으나 30대 이하의 꾸준히 순유출

* 특히 2017~2021년중 대구에서 경북으로 40대 이상이 2.7만명 이동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중 대구 40대 이상 순유출(4.1만명)의 64.5%, 경북 40대 이상 순유입(3.9만명)의 68.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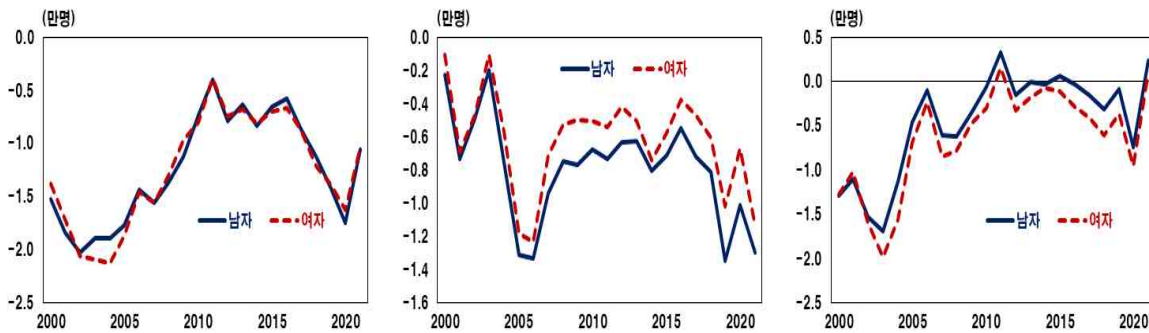
연령대별 사회증감
(대구경북) (대구) (경북)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성별로 보면, 대구는 남성, 경북은 여성의 순유출이 많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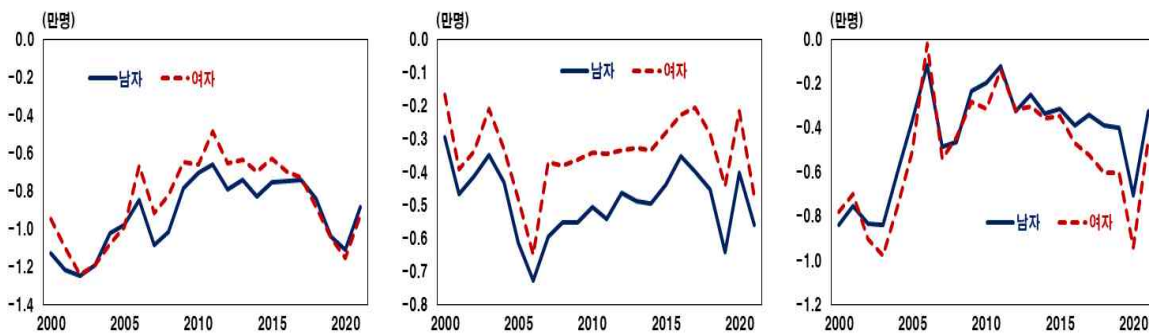
성별 사회증감
(대구경북) (대구) (경북)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특히 경북의 경우 2016년 이후 15~29세 여성의 순유출 규모가 남성 순유출 규모를 상회하면서 향후 출산율 하락 및 인구 자연감소를 가속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

15~29세 성별 사회증감
(대구경북)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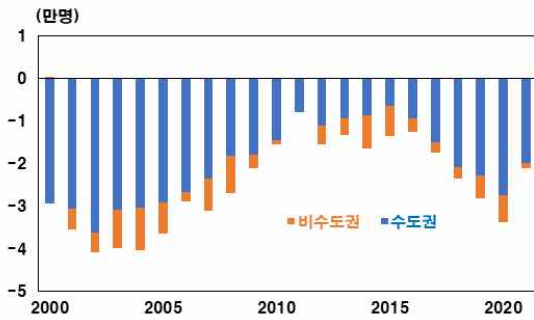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지역별로 보면, **최근 5년간(2017~2021) 대구경북지역 순유출**(124.0천명 : 대구 91.0천명, 경북 33.0천명) 인구의 **85.3%**가 **수도권**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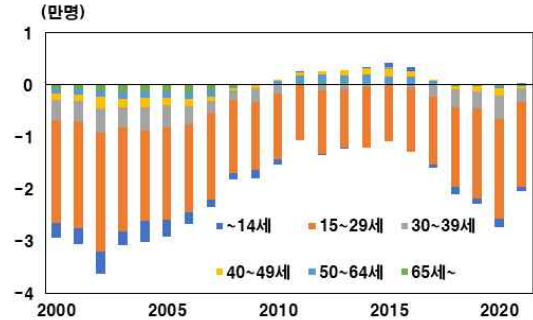
○ 특히 대구경북 15~29세 유출인구의 87.1%가 수도권으로 이동

대구경북지역 인구 순이동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대구경북지역 연령별 수도권과의 순이동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최근 5년간 대구경북지역 인구의 **순유출 이유**는 **직업**(-88.5천명), **교육**(-19.5천명), **주택**(-15.0천명) 등의 순임

— 대구의 경우 직업 및 주택 관련 순유출자가 대부분을 차지

— 경북은 직업 외에도 가족 및 교육 관련 순유출자가 비교적 많으며, **자연환경**을 누리기 위해 **경북**으로 **순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

전입사유별 순이동
(대구경북)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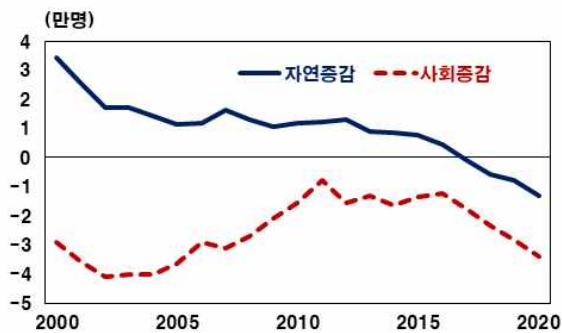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3 인구감소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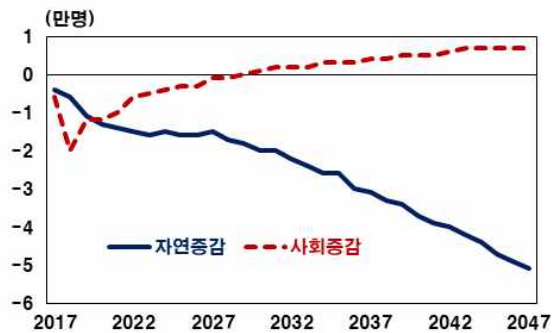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인구 감소는 대부분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왔으나 혼인율과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자연 감소 인구수가 사회적 감소 인구수보다 커지게 되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대구경북지역 인구 자연·사회증감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대구경북지역 인구 자연·사회증감 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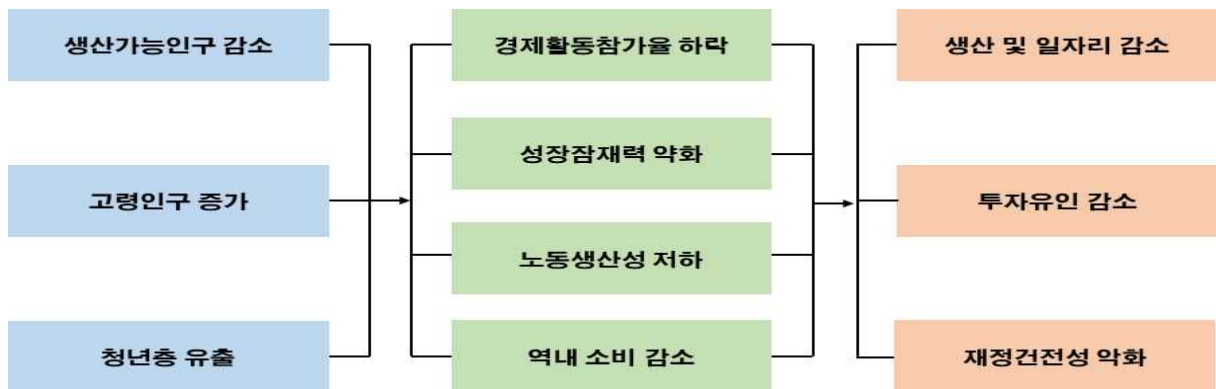
IV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 ◆ 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노동생산성 저하 및 역내 소비시장 규모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지역투자유인 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 가계소비지출 추정 결과, 대구와 경북의 가계소비지출은 2020~2025년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전망
 -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민간소비에 의한 생산유발액 및 취업유발 인원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

1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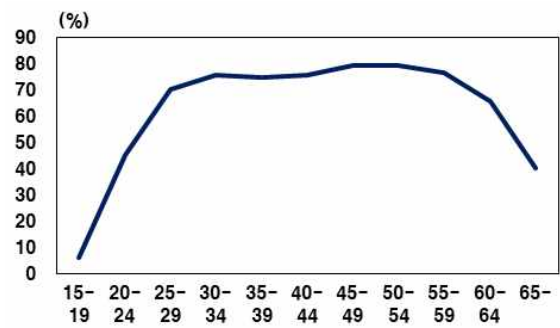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소비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이 나타나면서 투자유인이 줄어들고 생산·일자리가 축소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층 유출 및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 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
 - * 2021년중 대구경북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50-54세에서 정점(79.5%)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
 - ** 연령과 생산성 간의 관계는 역의 U자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고령층 취업자수 비중이 늘어날수록 노동생산성이 하락 (Liu and Westelius, 2016)

대구경북 생산가능인구 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대구경북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동향

- 또한 고령층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타 연령대 가구에 비해 낮은 점에 비추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시 전체 소비규모가 줄어들 소지

* 대구경북지역 60세 이상 가구(가구주 기준) 비중은 2017년 34.4%에서 2047년 64.1%로 늘어날 전망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7)

** 2021년 3/4분기 기준 전국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3.5%로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68.1%를 하회

- 생산성 저하 및 소비시장 규모 축소는 투자유인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데다,

세입기반 축소 및 재정지출(연금 및 복지지출 등)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

- 2021년 기준 대구와 경북의 재정자립도*(대구 39.99%, 경북 25.07%)는 각각 광역시, 광역도 재정자립도 평균을 하회(광역시 41.10%, 광역도 29.30%)

* 전체 예산에서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2 가계소비지출 추정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주 연령별 소비데이터와 「장래가구추계」의 시도별·가구주 연령별 장래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구, 경북 및 전국의 가계소비지출을 연간(2020, 2025, 2030, 2035, 2040, 2047년)으로 추정*,**

* 자세한 추정 방법은 p.17 <참고2> 참조

** 동 추정 결과는 연령별 소비행태(평균소비성향 등), 경제성장률 등이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분석(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은 2019.1/4분기 이후 큰 변화가 없었음)

<참고2>

가계소비지출 추정 방법

□ (참고문헌)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산업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2013)”과 “인구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제주연구원, 2018)” 참고

□ (데이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0년 「가계동향조사」 ‘가구주 연령별 소비 데이터’와 「장래가구추계」의 ‘시도별·가구주 연령별 장래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도별 가계소비를 추정

① 「가계동향조사」 ‘연령별 소비데이터’ : 12개 산업*에 대한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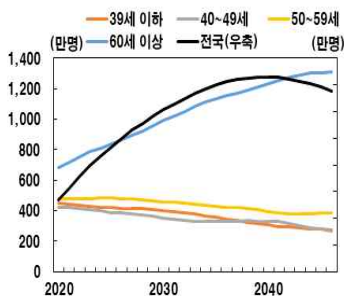
*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② 「장래가구추계」 ‘연시도별 장래가구추계’ : 2000~2047년 중 연령별(5세 단위)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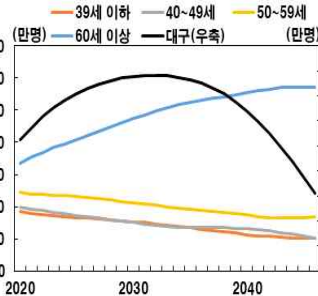
—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대구경북 가구수는 대략 2035년 전후(대구 2032년, 경북 2038년)까지는 증가하겠으나 이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령별로 60세 이상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60세 미만은 꾸준히 감소

— 대구의 전체 가구수가 경북에 비해 더 빨리 하락하기 시작하며 감소폭도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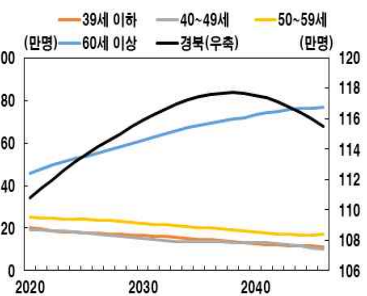
전국 가구수 전망



대구 가구수 전망



경북 가구수 전망



자료: 장래가구추계

□ (가계소비지출 추계) 2020년 기준 상품별*·연령별 가계소비지출에 연도별·연령별 장래가구수를 곱하여 추정

* 가계소비 증감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별’로 분류되어 있는 통계청 가계소비 지출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 ‘상품별’ 가계소비지출로 전환*(p.32 <붙임1> 매칭표 참고)

○ 연도별 가계소비지출 = 상품별·연령별 월평균 소비액(C_{ij})
 × 지역별·연령별 장래가구수(P_k)×12
 단, i=상품(제조업, 서비스업 등), j=연령, k=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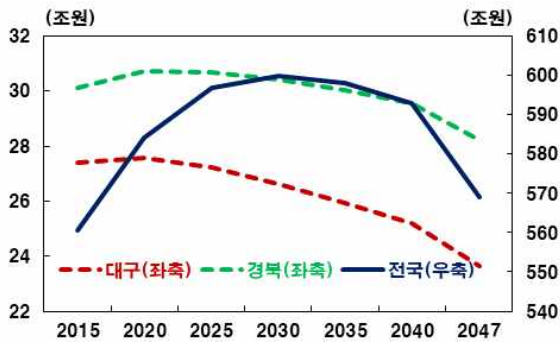
□ 대구와 경북의 가계소비지출은 2020~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구의 가계소비지출이 경북보다 빠르게 감소할 전망

* 전국은 2030~35년부터 감소 예상

○ 2040년 대구 가계소비지출은 2020년 대비 8.6% 감소하여 경북의 가계 소비 감소폭(-3.7%)을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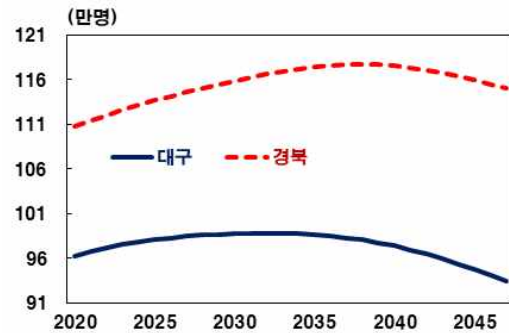
— 대구는 2020년 현재 비고령층의 소비 비중이 경북보다 높아 고령화 진행 시 총소비 감소분이 큰 데다, 대구 가구수도 경북에 비해 더 이른 시기에 하락하기 시작한 데 주로 기인

향후 가계소비지출 전망



자료: 자체 추정

대구와 경북 가구수 전망



자료: 장래가구추계

□ 상품별로는 60세 이상 가구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농림수산물과 전기 가스수도는 향후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겠으나, 40~59세 가구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기준 연령별·상품별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물과 전기가스 수도의 경우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비중이 높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60세 미만 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임

연령별·상품별 가계소비지출 비중(2020년 기준)

(단위: 조원, (%))

	연령(가구비중)	농림수산물		전기가스수도		제조업		서비스업	
전국	39세이하(22.1%)	7.4	(13.6)	4.5	(18.2)	48.4	(24.0)	68.0	(22.4)
	40~49세(20.8%)	12.3	(22.7)	6.0	(23.9)	55.1	(27.3)	83.9	(27.7)
	50~59세(23.5%)	13.9	(25.7)	6.4	(25.6)	53.4	(26.5)	85.9	(28.3)
	60세 이상(33.6%)	20.6	(38.1)	8.1	(32.3)	44.7	(22.2)	65.5	(21.6)
	합계	54.2	(100)	25.0	(100)	201.6	(100)	303.3	(100)
대구	39세이하(19.2%)	0.3	(11.6)	0.2	(15.7)	2.0	(20.9)	2.8	(19.5)
	40~49세(20.6%)	0.6	(22.0)	0.3	(23.5)	2.6	(27.1)	3.9	(27.4)
	50~59세(25.3%)	0.7	(27.3)	0.3	(27.4)	2.7	(28.7)	4.4	(30.6)
	60세 이상(35.0%)	1.0	(39.1)	0.4	(33.5)	2.2	(23.2)	3.2	(22.6)
	합계	2.6	(100)	1.2	(100)	9.5	(100)	14.3	(100)
경북	39세이하(18.3%)	0.3	(11.0)	0.2	(15.0)	2.2	(20.7)	3.1	(19.3)
	40~49세(17.6%)	0.6	(18.7)	0.3	(20.2)	2.5	(24.1)	3.9	(24.4)
	50~59세(22.6%)	0.7	(24.2)	0.3	(24.7)	2.8	(26.6)	4.5	(28.4)
	60세 이상(41.5%)	1.4	(46.1)	0.5	(40.1)	3.0	(28.6)	4.4	(27.9)
	합계	3.0	(100)	1.4	(100)	10.5	(100)	15.8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한국은행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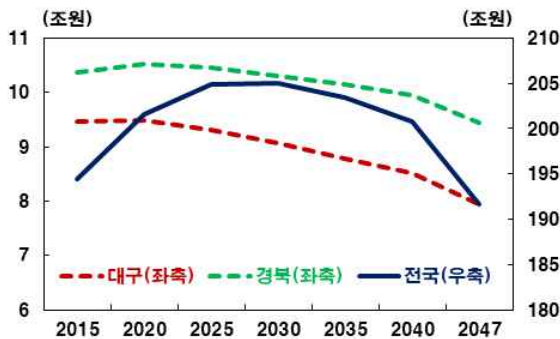
- **제조업** 상품 **가계소비지출**은 대구와 경북이 2020~202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2020년 대비 각각 10.3% 및 5.5% 감소

— 섬유가죽,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운송장비(자동차), 기타 제조업(가정용 소모품, 취미용품, 장식품 등) 제품들은 2020년 이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비중이 높은 의약품 등 화학제품 소비는 2035년 이후부터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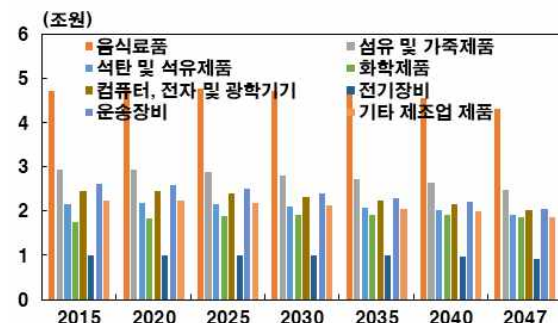
* 지역별 상품(대분류)의 소비지출 데이터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를 공표하지 않음

제조업 가계소비지출 전망



자료: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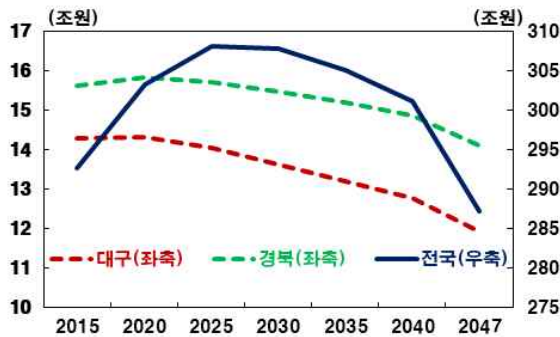
대구경북 제조업 업종별 가계소비지출 전망



자료: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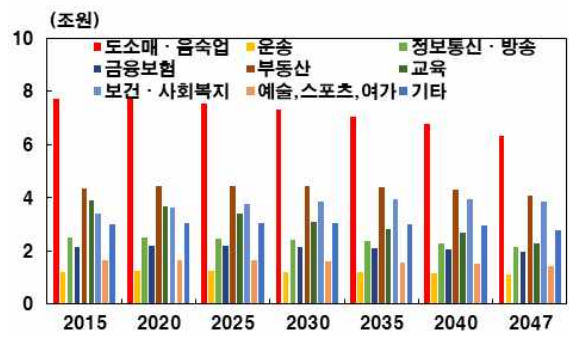
- 대구와 경북 가구들의 **서비스업**에 대한 **가계소비지출**도 2020~202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2020년 대비 각각 10.8% 및 6.0% 감소 전망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는 2020년 이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교육서비스**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가파르게 감소(2040년에는 2020년 대비 31.7% 감소)
 - 반면 요양, 의료서비스 등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비중이 높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40년 이후 감소 예상

서비스업 가계소비지출 전망



자료: 자체 추정

대구경북 서비스업 업종별 가계소비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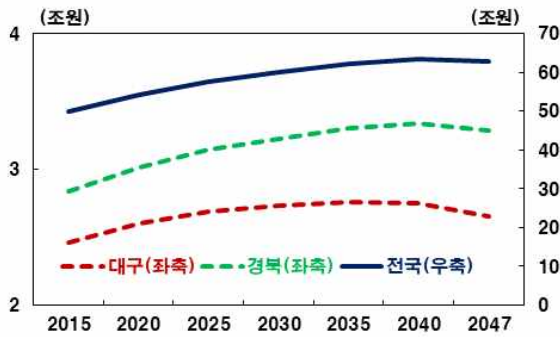


자료: 자체 추정

- **농림수산물**의 경우 전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구와 경북은 각각 2035년, 2040년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기가스수도**의 경우 대구가 전국 및 경북보다 먼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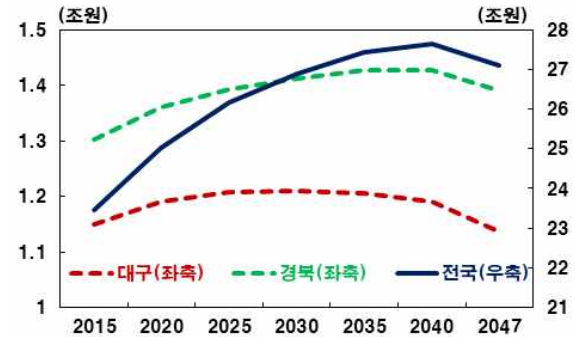
* 이는 대구경북의 가구수가 전국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데 기인

농림수산물 가계소비지출 전망



자료: 자체 추정

전기가스수도 가계소비지출 전망



자료: 자체 추정

3 민간소비에 의한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추정

□ 既 推정한 대구경북지역 가계소비지출액을 바탕으로 산업연관표(2015년 기준)를 이용하여 민간소비에 의한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추정^{*,**}

* 자세한 추정방식은 p.33 <붙임2> 참조

** 대구와 경북의 국산품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생산·취업유발계수에 구조적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분석(p.34 <붙임3> 참조)

○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장기 성장률 전망, 총요소생산성 변화, 산업구조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는 자료수집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민간소비 변화**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에 대해서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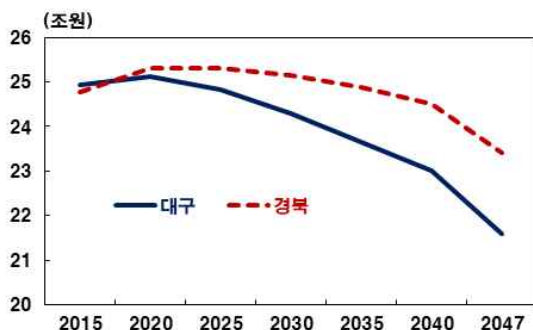
□ **민간소비에 의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는 대구는 대략 2020~2025년부터, 경북은 2025~203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대구의 감소폭이 경북보다 가파를 것으로 **예상**^{*}

* 대구의 가계소비지출이 경북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하는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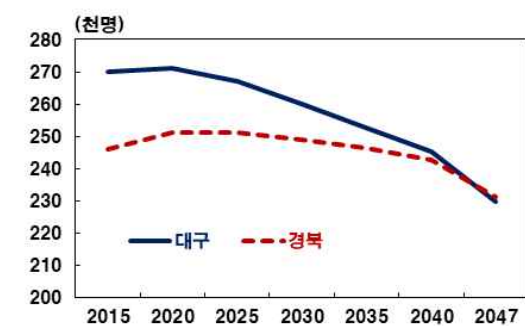
○ 민간소비에 의한 역내 **생산유발액**(2020년 현재 대구 25.1조원, 경북 25.3조원)은 2040년중 대구와 경북이 2020년 대비 각각 8.4% 및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유발인원(2020년 현재 대구 27.1만명, 경북 25.1만명)도 2040년에는 대구와 경북이 2020년대비 각각 9.5% 및 3.5% 감소 예상

대구와 경북 지역내 민간소비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생산유발액) (취업유발인원)



주: 1) 해당년도의 대구와 경북 민간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유발된 역내 생산액
자료: 자체 추정



주: 1) 해당년도의 대구와 경북 민간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유발된 역내 취업자수
자료: 자체 추정

1

평가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은 총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령화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40년 전후로는 경북 뿐만 아니라 대구도 지방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50세 미만 인구는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향후 대구 인구가 경북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할 전망
 - 경북은 2020년 이미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경북 군지역(칠곡군 제외) 전체로는 고위험단계에 진입
- 2000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인구 감소는 대부분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왔으나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
 - (자연 감소) 대구경북지역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7년부터는 인구가 자연감소로 전환
 - (사회적 감소) 2011년 이후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청년층(15~29세)의 사회적 감소(수도권으로의 유출)가 심각
- 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노동생산성 저하 및 역내 소비시장 규모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대구와 경북의 가계소비지출은 2020~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에 의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도 대구는 대략 2020~2025년부터, 경북은 2025~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
 - 특히 대구는 비고령층의 소비 비중이 경북보다 높아 고령화 진행 시 총소비 감소분이 큰 데다, 대구 가구수도 경북에 비해 더 이른 시기에 하락하기 시작하여 대구의 가계소비지출이 경북보다 빠르게 감소할 전망

2

대응방안

-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층 등의 순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등이 필요
- ② (귀농·귀촌 지원) 경북의 지역소멸위험이 큰 군지역들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
- ③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 저학력·저숙련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인력 등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 ④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 일과 가정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⑤ (광역지자체 주도의 정책 실행)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 시 중앙정부 정책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대학, 기업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

- 대구경북지역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

*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행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은 p.29 <참고3> 참조

-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층 등의 순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등이 필요
 - 기술혁신 및 신규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차, 이차전지,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 직업교육 강화(산학연 활성화 등), 대학 및 지자체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지역내 취업기회 확대는 우수인력 유출 방지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존속에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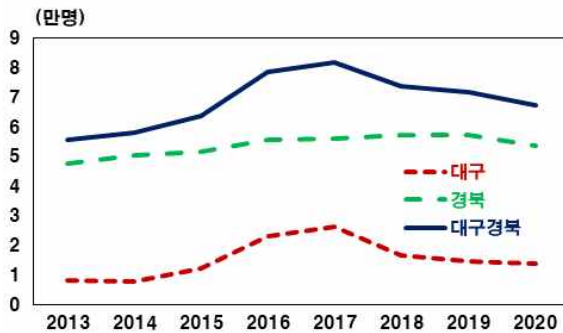
② (귀농·귀촌 지원) 경북의 **지역소멸위험이 큰 군지역***들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

* 2016~20년중 울릉군에 귀농·귀촌한 인구는 총 2,761명으로 2020년 울릉군 전체인구의 30.4%에 달하였음. 마찬가지로 예천군(27.3%), 칠곡군(21.9%), 군위군(21.3%), 청도군(20.2%) 순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 사람
 귀농인 :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귀촌인 : 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귀어인 및 동반 가구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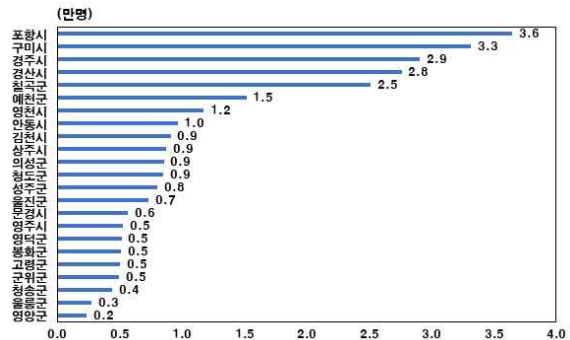
- 대구경북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인수는 2013년 5.6만명에서 2020년 6.7만명으로 완만하나마 증가

대구경북지역 귀농·귀촌인수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경북 시군별 귀농·귀촌인수(2016~20)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 빈집* 개·보수를 통한 이주지원주택 임대**, 주거자금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강화

* 대구경북 읍·면(邑·面)지역의 빈집수는 2015년 7.8만호에서 2020년 9.4만호로 증가

** 경남 함양군의 경우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임대인에게 지원해주는 대신 5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를 하도록 하여 귀농·귀촌인을 유치

*** 대구광역시는 귀환(전입) 예정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 (2022년 대구광역시 인구활력정책(2021.12.20일))

— 신중년 이주코디네이터* 및 귀농귀촌 실용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귀향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확대

* 40~50대 신중년 및 은퇴(예정)자의 지역생활 로망을 실현하며 이주민과 주민, 지자체를 연결하여 귀농·귀촌인의 이주를 돕고 기존 주민과의 마찰을 축소하는 역할(주택 임대, 주민 교류 및 갈등 관리 등) 수행

** 전북 완주군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귀농·귀촌을 희망·정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및 멘토프로그램 등 실용 교육을 실시

***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유타에 관심있는 출향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및 일자리 정보와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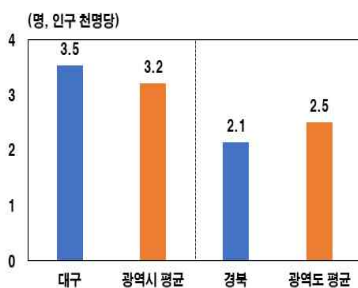
1년 이상 경력의 타지역 거주 청년과 지역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칭 및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2022년 대구광역시 인구활력정책(2021.12.20일))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별 중심거점도시 개발 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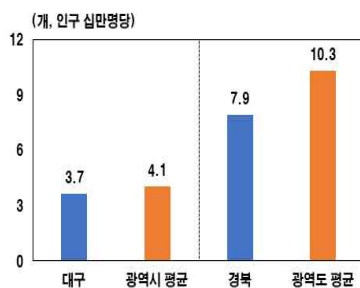
— 대구는 문화·교육 측면에서, 경북은 의료·문화·교육 측면에서 생활 여건이 타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을 위해 중심거점에 관련 시설을 집중하고 주변부-중심거점 간 교통 접근성을 향상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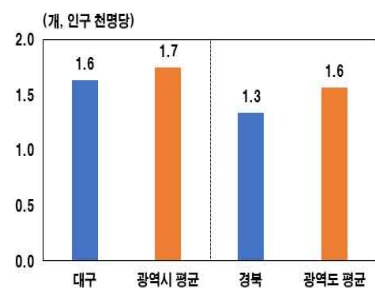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수



자료: 통계청

③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 저학력·저숙련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인력 등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13년 4.2만명에서 2019년 5.5만명으로 증가

○ 현재 지역의 외국인 전문인력은 회화지도, 예술홍행 분야에 주로 종사*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 기술지도** 등의 **부문**으로 **채용**이 **확대**될 필요

* 2019년중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5.4%였으며, 전문인력 중에서 연구, 기술지도 등에 종사하는 비중은 35.9%에 불과

○ 다만 문화 차이, 일자리 경쟁 등으로 지역 거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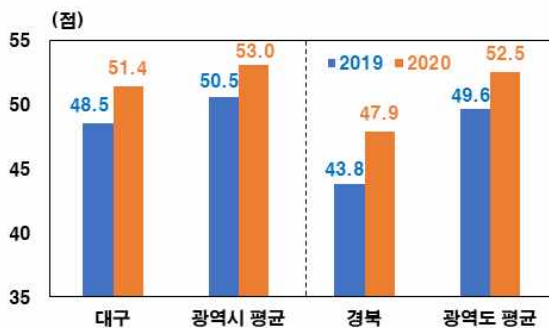
외국인 거주자와의 **상호 포용적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한편, **외국인력의 적응 및 사회통합**을 **지원**할 필요

④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 **일과 가정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2020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전년보다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여성의 가사 부담도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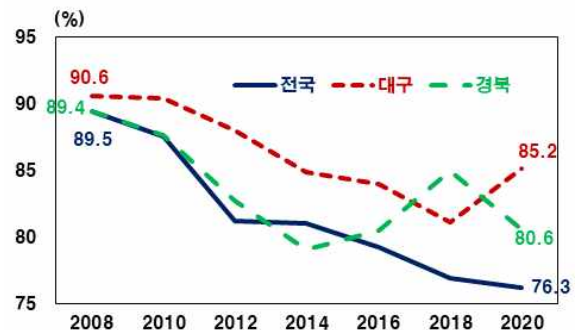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는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일생활 균형지수를 매년 발표

대구경북지역 일·생활 균형지수



자료: 고용노동부

대구경북지역 가사분담실태¹⁾ 변화



주: 1) 여성이 주로 담당한다는 응답 비중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특히 비정규직 또는 소규모 기업 근무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인체계***를 **확대**할 필요

* 여성가족부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는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대구시: 해외마케팅사업 참가기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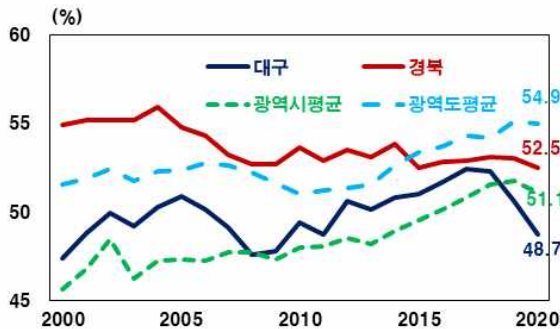
경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 시 우대 평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자 지원 등

- 2020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61.9%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종사자 규모 4명 이하인 소기업에 소속된 경우는 4.4%에 불과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결과, 2020)

- 이러한 일·가정 양립 강화를 통해 **여성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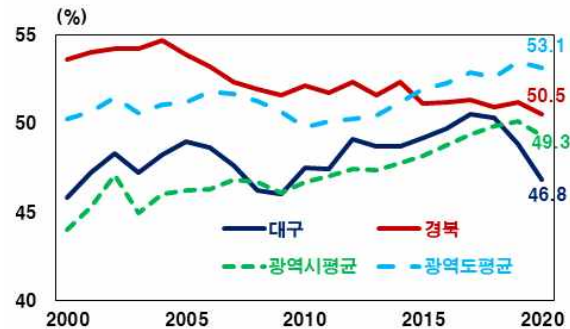
- 특히 대구와 경북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타지역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므로 여성 고용 확대가 생산인력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대구경북지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구경북지역 여성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⑤ (광역지자체 주도의 정책 실행)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 시 중앙정부 정책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대학, 기업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지역별로 고유의 사회·경제적 특징이 있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 국가 주도의 일원화된 정책보다는 **지자체별로 유연성 있는 정책**이 더 **효과적**

— 정부도 최근(2021.10월)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대구와 경북은 이에 발맞추어 대구 경북지역 초광역협력을 추진중

*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 다만 각 지자체의 개별적인 대응이 주변 지자체와 체로섬 경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개발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참고3>

대구·경북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 대구광역시는 청년 유입, 영유아 및 청소년 지원, 결혼 및 출산 지원을 통해 저출산·청년 인구 회복을 위한 2022년 인구활력정책을 발표 (2021.12.20일)

- 신혼 보금자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 축하금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영아수당 지급, 어린이집·유치원생 건강한 식단 제공, 교복비 및 다자녀 3순위 이상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대학생 및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청년 미래 설계 지원 및 귀환 지원 등을 포함

주요 정책		정책 내용
청 년	대학생 정착지원금	타지역출신 전입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착지원금(최초 20만원) 지급, 전입유지시 6개월마다 20만원 추가 지급(최대 8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2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만 19~39세 무주택청년,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연간이자 최대 100만원(최대 4년간) 지원
	청년전세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만 19~39세 무주택청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반환보증료 전액(임차보증금의 0.02%, 최대 4년간) 지원
	대구 청년 꿈꾸는대로 응원 펀딩	만 19~39세 청년, 실험·연구 등 혁신활동에 대해 팀단위 5억원(1팀당 최대 1천만원), 개인단위 2억 5천만원(최대 500만원) 지원
	청년 귀환 채널 구축	대구유턴에 관심있는 출향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정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대구 탐방 프로그램(창업·취업·프리랜서) 제공
	대구 유입 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	1년이상 경력의 타지역 거주 청년과 지역 5인 이상 중소기업업을 대상으로 지역 5인 이상 중소기업 매칭 및 인건비 등 지원
영 유 아	영아수당	생후 24개월까지 월 30만원씩 1인당 720만원 지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어린이집 이용아동 1인당 월 7천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사립유치원 원아 급식비 지원
청 소 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학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지원	출생 3순위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인 경우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결 혼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역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1.6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금액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0.5~1.6% (기준 0.5~0.7%) 대출이자 지원(최대 연 288만원, 최장 6년)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구시 귀환(전입) 예정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2억원이하, 대출한도 1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1.0~1.6% 대출이자 지원(최대 연 160만원, 최장 4년)
	임산부 콜택시(맘스콜)운영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콜택시 이용금액의 70% 지원(월 2만원 한도)
출 산	출산 축하금 지원	둘째아 출산 가정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지급(기준 2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1인 200만원 지급(기준 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22년 이후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지원
	대구형 산모관리사 파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자료: 2022년 대구광역시 인구활력정책(2021.12.20일)

□ 경상북도는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6대 추진 전략을 발표 (2021.11.24일)

* 도지사, 국토연구원(2021.4~11월 연구용역 수행), 용역 자문위원, 도 관련부서 및 시·군 담당자 등 50명 등이 경북도청에 참석하여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중장기 비전·전략 및 정책방향 등을 토론

전략	주요 정책과제	지자체 시범사업
① 생활인구 확보와 유연거주 촉진	생활·관계인구 확보 시범사업 -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노마드 대상 워케이션 기반 조성, 1시간 1특화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물 꾸러미 구독경제 사업 지원	- 경주에서 살아보기(경주), 칠곡군 청년인재 지역 정착 지원사업(칠곡),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경남)
	제2의 고향만들기 추진 -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 예정(2023.1월) : 출향인들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 받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음 - 메타버스 활용 사이버 경북도민 확대	- 없음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 - 영양군 '별빛정원' 조성 시범사업 예정(사업기간: 2021.11 ~ 2022.10월, 총사업비 : 50억)	-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사업(경북)
② 세대 조화 통합형 경북 만들기	경북형 지방소멸 대응 선도모델·시범사업 확산 - 이웃사촌시범마을(의성군 안계면 일대) : 청년 주거공간 조성, 청년 사회적 관계자본과 관계망 형성, 청년 생활여건 개선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이웃사촌시범마을(경북 의성)
	신중년 이주 및 정착 지원 - 신중년 이주 코디네이터 육성 : 이주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거주한 주민 등 신중년을 대상으로 이주 코디네이터 육성 프로그램(이수충 발급, 월수당 지급 등) 운영 - 마을 관리자 육성 : 주민 및 마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재취업 기회 제공(순천시 맥가이버 운영 사례) - 지역 이주청년 취창업 컨설팅 지원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충남도청),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전남 무주), 청년 맥가이버 지원 사업(전남 순천), 실속있는 안주생활(전북 완주)
	자립형 노인공동체 마을 조성 - 경북 마을형 CCRC(은퇴자·노인공동체) 조성(공유 주방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이동지원 매니저 도입) - 스마트 경로당 등 돌봄 서비스 제공(부천시 사례)	-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함양 장수마을 조성사업(경남 함양)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정착 지원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및 절차 개선 - 체류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없음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 지역 특산물 오프라인 구매시 할인폭 확대 -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의성군 마을 사례) - 친환경 및 유기농 로컬푸드 생산·유통 단지 조성	-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경남 거제)
③ 지역 산업 문화 특화와 브랜드 강화	지역 문화·자산 연계와 명소화 - 지역 건축·예술·전통자산 연계	- 개척자 콜로키움 사업(강원 정선)
	지역대학·지자체 협력 강화 - 지역문제 공동 해결 및 역량강화 - 주민 공감교육 및 갈등관리 프로그램	- 칠곡군 청년인재 지역 정착 지원사업(경북 칠곡)

④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공동체 구성	스마트 건강·안심마을 조성 - 마을주치의 시범사업 - 경북 의료레저복합형 CCRC 조성 -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료인프라 확충	- 농어촌 승하차 도우미 운영 ·함양 장수마을 조성사업 (경남 함양)
	주거·생활기반 레벨업과 생활거점 조성 - 과소마을 생활거점 조성 - 이동형 생활서비스 지원 및 생활서비스 가업 승계 촉진 - 여성이 행복한 안심 생활공간 조성	- I-mom(아이맘) 안심서비스 사업(경북 구미), 상주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경북 상주),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경남 통영)
	노후·유휴자원의 관리와 현명한 이용 촉진 - 빈집 및 폐교 활용 촉진 - 고택 등 노후·유휴자원 활용 - 유휴 산업단지 용도변경 등을 통한 특화 클러스터 조성	- 의성 미래교육지구 운영 (경북 의성),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경남),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리모델링 사업 (경남 함양), 청년 맥가이버 지원사업(전남 순천)
⑤ 지역 간 연대·협력 ·공유와 관계 강화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 연대 강화 - 서울-경북 간 사람자원 교류 확대 - 도·농 교류 사업 및 대상 지역 확대	- 수성·경산 경제협력 기본 구상 용역사업(경북 경산),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경남 통영)
	유연한 지역생활권 운영과 공유경제 강화 - 유연한 생활권 형성과 운영 - 생활서비스 시설 지역간 공동 이용	- 수성·경산 경제협력 기본 구상 용역사업(경북 경산),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경남 통영)
⑥ 미래에 선제적인 대비와 지역 전환	경북형 친환경 도시·생활기반 조성 - 경북형 탄소중립도시 시범 조성 - 친환경 모빌리티 운행 지원	- 천원택시(경북 청송), 임산부 아기사랑택시(경북 영천),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경남 함양), 정선군 버스 공영제 추진(강원 정선)
	디지털 전환 대비 스마트 경북 구현 - 스마트 빌리지 조성 - 디지털 뉴딜·기술 기반 구축 사업	-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 방제단 육성(경남 창원)

자료: 경상북도(2021.11.24일)

<붙임1>

통계청(가계동향조사) 산업 및 산업연관표(IO) 상품 매칭표

산업연관표(IO) 상품		통계청(가계동향조사) 산업
A	농림수산물	곡물, 육류,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유제품및알, 과일및과일 가공품, 채소및채소가공품, 해조및해조가공품
C01	음식료품	곡물가공품, 빵및떡류, 육류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 유지류, 당류및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및차, 주스및기타음료, 주류, 담배
C02	섬유 및 가죽제품	직물및외의, 내의, 기타의복, 신발, 가정용섬유
C04	석탄 및 석유제품	운송기구연료비
C05	화학제품	의약품, 의료용소모품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보건의료용품및기구, 통신장비,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기록매체, 위생및이미용용품, 시계및장신구
C10	전기장비	가전및가정용기기
C12	운송장비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C13	기타 제조업 제품	가구및조명, 실내장식, 가사용품, 가정용공구및기타, 가사소모품, 오락문화내구재, 악기구구, 장난감및취미용품, 캠핑및운동관련용품,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관련용품, 문구, 이미용기기, 기타개인용품
D	전력, 가스 및 증기	연료비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의복관련서비스, 신발서비스
H	운송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우편서비스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식사비, 숙박비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통신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K	금융 및 보험서비스	보험, 기타금융
L	부동산서비스	실제주거비, 주택유지및수선, 기타주거관련서비스
P	교육서비스	정규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및보습교육, 학생 학원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복지시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운동및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단체여행비
S	기타서비스	가구·조명및장식서비스, 가전관련서비스, 가사서비스, 운송기구유지 및수리,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영상음향및정보기기수리, 오락문화 내구재유지및수리, 화훼및애완동물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기타서비스

<붙임2>

시도별 연간 생산·고용유발효과 추정 방법

□ **(데이터)** <참고2>를 참조하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된 상품별 연간 가계소비지출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사용

□ **(대구와 경북의 민간소비 추정)**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의 상품별 가계소비지출을 바탕으로 대구와 경북의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민간소비를 추정*

* 지역산업연관표 상 민간소비는 (가계소비+민간비영리단체소비-비거주자 국내소비+거주자 국외소비)로 계산되나, 가계소비가 민간소비를 대표한다고 가정

① <참고2>를 바탕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해당년도(2020, 2025, 2030, 2035, 2040, 2047년) 상품별 가계소비지출 및 해당년도 전체 가계소비지출 증가율 추정

② ①에서 추정한 가계소비지출 증가율로 해당년도(2020, 2025, 2030, 2035, 2040, 2047년) 지역산업연관표상 대구와 경북지역 민간소비 총액 추정

③ ①에서 추정한 해당년도(2020, 2025, 2030, 2035, 2040, 2047년) 상품별 소비지출 비중과 ②의 해당년도별 민간소비 총액을 이용하여, 해당년도 지역산업연관표상 대구와 경북지역 상품별 민간소비 추정

④ ③에서 추정한 해당년도(2020, 2025, 2030, 2035, 2040, 2047년) 상품별 민간소비 총액에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의 지역별·상품별 소비지출 비중을 곱하여, 해당년도 지역산업연관표상 대구와 경북지역 지역별·상품별 민간소비 추정

□ **(유발효과 추정)** 추정된 해당년도(2020, 2025, 2030, 2035, 2040, 2047년) 대구와 경북 지역 민간소비 데이터와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의 생산·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해당년도 생산·고용유발효과 분석

○ 추정된 해당년도(2020, 2025, 2030, 2035, 2040, 2047년) 대구와 경북지역 민간소비 데이터에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의 생산·취업유발계수에 곱하여 각 해당년도 생산유발액 및 취업유발인원 도출*

* 즉, 미래년도의 민간소비 총액은 변화되었으나 지역간 생산 투입구조(중간투입을 및 부가가치비율)는 변화하지 않았음을 가정

— 생산유발액 및 취업유발인원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특정 지역의 전체 미래 민간소비가 유발한 생산·고용유발효과를 의미

<붙임3>

과거년도(2010, 2013, 2015년) 생산·취업유발계수 비교

□ 생산·고용유발효과 추정(<붙임2>)은 대구와 경북의 국산품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현재(2015년) 생산·취업유발계수가 미래(2020~2047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함

□ 가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품별 대구와 경북의 과거 3개년도(2010, 2013, 2015년) 생산·취업유발계수(행합*)를 비교한 결과 큰 변화는 없었음

* 행합은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상품별 산출단위이며, 민간소비로 인해 자가지역 유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유발계수 행의 합계

○ 대구지역은 제조업의 경우 생산유발계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취업유발계수는 감소하는 추세

대구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¹⁾ 3개년도 생산·취업유발계수

		2010	2013	2015
생산유발계수	제조업 평균	1.62	1.58	1.63
	서비스업 평균	1.53	1.53	1.66
취업유발계수	제조업 평균	7.6	7.3	6.7
	서비스업 평균	23.5	22.8	20.9

주: 1) 산업연관표(IO) 기준에 따른 상품 분류(<붙임1>): C(제조업), F~S(서비스) 평균
자료: 지역산업연관표(2010, 2013, 2015년)

○ 경북지역은 제조업의 경우 생산유발계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취업유발계수는 큰 차이가 없음,

서비스업은 생산유발계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취업유발계수는 하락하는 추세

경북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¹⁾ 3개년도 생산·취업유발계수

		2010	2013	2015
생산유발계수	제조업 평균	3.20	3.12	2.67
	서비스업 평균	1.38	1.37	1.53
취업유발계수	제조업 평균	6.7	6.2	6.7
	서비스업 평균	22.0	20.8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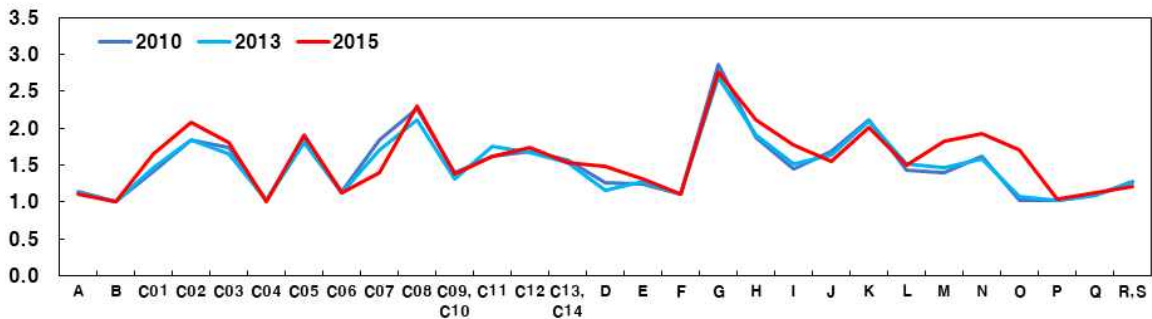
주: 1) 산업연관표(IO) 기준에 따른 상품 분류(<붙임1>): C(제조업), F~S(서비스) 평균
자료: 지역산업연관표(2010, 2013, 2015년)

○ 전체 상품별 생산·취업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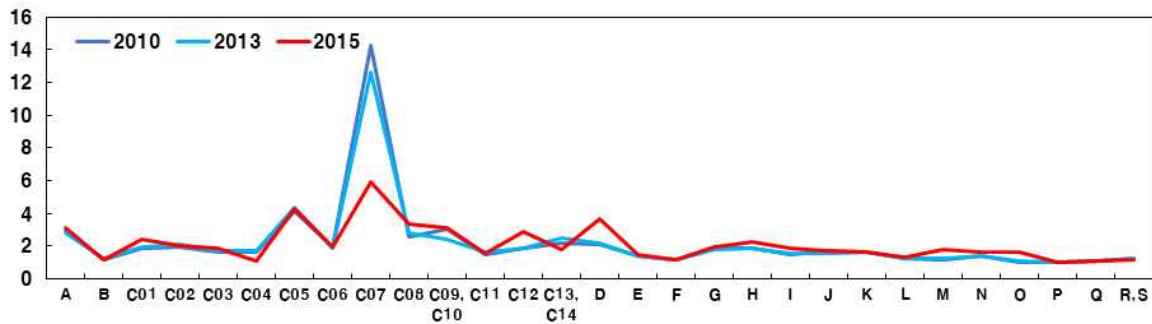
— 2015년도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대구는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N(사업 서비스),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 상품은 과거년도(2010·2013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경북은 C07(1차 금속) 상품이 과거년도 대비 하락

대구경북지역 상품별¹⁾ 생산유발계수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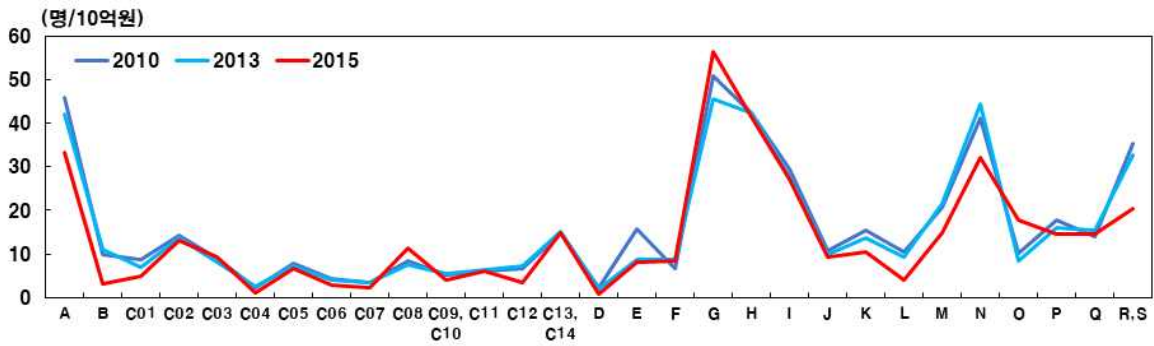
주: 1) 산업연관표(IO) 기준에 따른 상품 분류(<붙임1>): A(농림수산물), B(광산물), C(제조업), D~E(전력·가스·수도 등), F~S(서비스)
 자료: 지역산업연관표(2010, 2013, 2015년)

— 취업유발계수의 경우 대구는 G(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의 경우 과거년도 대비 상승하였으나, A(농림수산물), B(광산물), 여타서비스업(H~S)의 경우 과거년도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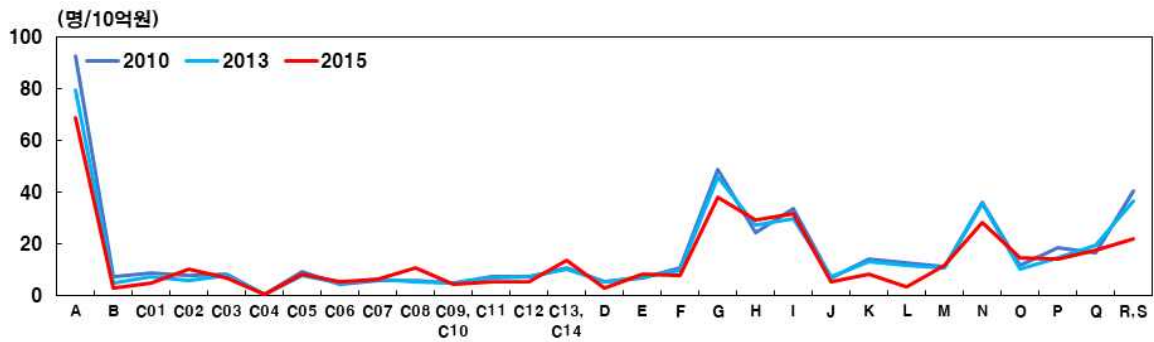
경북은 G08(금속가공)의 경우 과거년도 대비 상승하였으나, 일부 서비스(G, J~L, N·P·R·S)는 과거년도 대비 하락

대구경북지역 상품별¹⁾ 취업유발계수

(대구)



(경북)



주: 1) 산업연관표(IO) 기준에 따른 상품 분류(<붙임1>): A(농림수산물), B(광산물), C(제조업), D~E(전력·가스·수도 등), F~S(서비스)
 자료: 지역산업연관표(2010, 2013, 2015년)

참 고 문 헌

- 경상북도, “경북도,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대응 생존전략 마련”, 보도자료(2021.11.24)
- 고용노동부,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보도자료(2021.12.31)
- 고태호, “인구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주연구원, 2018
-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보도자료(2021.10.14)
- 대구광역시, “저출산 극복 및 청년 정착을 위한 내년도 예산 대폭 반영(6,932억원)”,
보도자료(2021.12.20)
-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8
- 이진면, 한정민, 김재진, 이용호, 김바우,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산업연구원, 2013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보도자료
(2021.10.18)
- Liu, Y., and Westelius, N., “The Impact of Demographics on Productivity and
Inflation in Japan”, IMF, 2016